

방치된 ‘독조라떼’에 폭발한 민심

독조라떼- 낙동강 녹조 + 발암물질

국제신문 김희국 조민희 기자 core@kookje.co.kr | 입력 : 2018-08-14 21:04:21 | 본지 1면

- 부산 수돗물 안전성 논란 속
- 정부도 市도 무대응 일관
- 100여 시민단체 대책위 발족
- “물이용부담금 거부 나설 것”

과불화화합물 검출에 따른 부산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에 이어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자 부산 시민이 ‘더는 참을 수 없다’며 대책위를 꾸리고 범시민운동에 나선다.



“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”- 폭염으로 인해 녹조가 심해지면서 부산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린 1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취수장 앞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이 녹조로 가득 찬 물을 뜨며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. 서정빈 기자

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시구·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시의회 대강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‘낙동강 수질 개선 및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’(이하 시민대책위)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. 시민대책위는 “보 조성 후 올해 녹조가 창궐하면서 낙동강은 이제 ‘독조라떼’를 넘어 ‘독조라떼’ 상태의 재앙을 맞고 있다”며 “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독성 물질을 쏟아내는 녹조가 번성하는데도 정부와 부산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”고 질타했다. 지난 6일 기준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남조류는 m^2 당 70만 셀(cell)을 넘고 지난 9일에도 51만여 셀이 관찰됐다. 현재 낙동강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‘경계’(m^2 당 1만 셀 이상)와 ‘대발생’(100만 셀 이상) 사이에서 ‘대발생’에 좀 더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.

그런데 정부와 부산시의 대응은 안일하다. 환경부는 여유 용수를 방류한다는 계획만 밝힐 뿐 근본적인 대책인 보 개방은 외면하고 있다. ‘시민 안전’을 중시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. 최근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낙동강 취수장과 정수장을 방문, 정부에 보 개방을 촉구하고 경계 단계 발령 후 매일 정수처리 검사와 활성화 교체주기 단축 등을 지시한 것과 대비된다.

시민사회 학계 정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시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한편,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확보하는 데 강력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. 부산대 주기재(생명과학과) 교수는 “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아나배나 등의 독성물질이 발생하고 또 이를 정수처리하려고 염소를 많이 쓰면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될 수 있다”며 “그런데도 시민의 물에 대한 관심은 서울시민의 절반에 불과하다”고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.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강호열 사무처장은 “시민대책위가 발족된 만큼 시청과 부산역, 청와대 앞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부산시민총궐기대회를 추진하고 나아가 물이용부담금 거부 운동도 진행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
시민대책위는 긴급대책회의 개최 후 ▷녹조 및 먹는 물 해결 때까지 시장실을 낙동강으로 이전 ▷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 ▷먹는 물 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부산시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에 전달했다.

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낙동강의 녹조 완화를 위해 안동·임하댐(1855만 t), 합천댐(1800만 t)에 확보된 환경대응용수 3655만 t을 방류했다.

한편 오 시장은 녹조의 근본 해결을 위해 보 개방 및 녹조에 따른 정수처리비용을 국가재난사태에 준해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.

김희국 조민희 기자 core@kookje.co.kr